

일본도서관협회 선정 2002년 도서관계 7대 토픽

출처 : 일본도서관협회 기관지 『圖書館雜誌』 2002년 12월호 기획기사

(기사제목 : 2002★トピックスを追う)

◆ 국립국회도서관, 3관 체제 출범

2002년 5월 동경의 국제어린이도서관 전면개관 및 10월 교토의 관서관 개관으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동경 본관」「관서관」「국제어린이도서관」등 3개 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체제에 들어갔다.

한편 10월에는 도서관홈페이지를 전면 개정하여 자료신청 기능을 추가한 NDL-OPAC 시스템 운영 및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메이지시대 간행도서 열람 DB 제공 등 전자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한 한해였다.

◆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

2001년 12월 공포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하면 국가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책정 공표하여야 하며, 제9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시책에 관한 계획」을 책정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의 공청회 등을 실시, 2002년 6월 원안을 공표하였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02년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02년-2006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저널 이용 증가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변화

도서관 자료이용 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저널의 이용과 취급을 둘러싸고 출판계, 학술연구자, 도서관, 해외간행물수입업자 등이 각자의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전자저널의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동일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저널의 수가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대학도서관은 전자저널 도입의 조류는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자저널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는 등 전자저널 구입 예산 확보에 대비하고 있다.

◆ ‘도서관은 베스트셀러 대본소’ 라는 비판을 둘러싼 논의와 도서관계의 반론

1998년경부터 저자와 출판계측으로부터 공공도서관을 「무료대여소」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반론과 양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연일 신문과 방송 등이 취급하는 핫 이슈가 되었으며,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자, 출판사, 독자 모두가 관련되어 있어 향후 공공도서관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테 마가 되었다.

이에 2002년에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상호이해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펜클럽 주최 「격론! 작가 vs

도서관 -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의 패널토론회가 열리는 한 편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10월 전국도서관대회에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상호이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분과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후나바시(船橋)시립서도서관 장서폐기 문제

2002년 4월 12일자 산케이(産經)신문 1면에는 2001년 8월에 치바현(千葉縣) 후나바시(船橋)시(市) 서도서관(西圖書館)이 특정 보수 저자의 책을 집중적으로 제적·폐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 직후 시교육위원회는 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제적이유가 불명확한 107책의 대부분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회원의 저서임이 밝혀졌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이 문제를 도서관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유선언」이념의 확인과 보급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도서관문제연구회는 7월 전국대회에서 후나바시도서관과 해당직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한편 제적·폐기된 도서의 저자 8명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해당 도서관직원과 후나바시시장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우편요금 할인제도 폐지로 장애인서비스 난관 봉착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 도서관에 오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대출로 자료를 보내는 서비스를 해왔다.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1998년 전국 조사에 의하면 449관이 우편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그 내역은 점자자료 및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우편대출서비스는 맹인용우편물 요금 무료제도 및 기타 각 종 할인제도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 검토의 배경에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권이 우편사업의 민간참여 방침 추진하고 있는데 있으며, 2003년 4월 발족 예정인 일본우정공사는 종래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제3종·제4종 우편제도의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무료 및 할인제도가 폐지되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의 우편대출서비스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도서관협회는 총무성에 맹인용우편물 무료제도 및 장애인용 책자 소포 할인제도의 존속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어느 한 도서관이 맹인용우편물이 유료화 될 경우 연간 우편대출서비스 우송비가 300만엔(약 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동경 23구립(區立) 도서관 카운터업무 위탁

올해 일본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區)가 구내 11개 도서관 중 8개관의 카운터업무(대출·반납, 이용자 등록, 대출예약접수 등)를 위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도내 총 23구 중 12구의 도서관 카운터업무가 민간업자에게 위탁된다. 현재 동경시는 사서 직원 모집 계획 및 사서직 인사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총 216관 중 사서직 관장은 31명뿐(14%)이며 사서직원 배치율은 23.5%에 불과하다.

카운터업무의 민간위탁 조치에 따라 저임금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에 따른 업무의 계속성·축적성 상실, 관내 위기관리유지의 어려움, 대출예약 연락·독서상담 등 이용자 프라이머시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해도 되는가 등 도서관 행정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약 번역: 편집자〉